

# 김행 '코인 축적'·유인촌 '블랙리스트'... 장관 자격 공방

여가·문화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김행, 위키트리 기사로 코인 보유"  
"유인촌, MB 국정원 문건 보고 받아"  
野 질타에 興 "정치 공세일 뿐"

5일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적격성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11일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에선 야권이 버려진 인사청문회치고는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코인 보유 의혹과 성범죄 보도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별도 답변 기회를 주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텐트이라는 곳에 넣고, 스텐트로부터 아마어마하게 스텐탈라(코인)를 받았다"며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 어뷰징(조화수 조작)까지 했고, 아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과거 위키트리가 게시한 성범죄 관련 기사를 거론, "여성 인권이나 2차 피해는 개의치 않고 조화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

라는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여성가족부 공직까지 맡겠다는 것은 욕심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별도 해명 기회를 제공하면서 방어를 나섰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김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노무현 정부 당시 정상명 검찰 총장은 권양숙 여사를 '형수님'이라고 불렀다. 의혹 제기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질의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충돌하면서 막말과 고성도 고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과 관련,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찍어내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놔다고 하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분(김건희 여사)은 그분대로 성공한 분이시고, 저는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를 관리·실행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등적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MB 정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 등을 거론하며 "당시 (유 후보자가)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이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사가 의사진행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 계속 부인하는 건 위증"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전혀 없는 사실을 갖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이용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장관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건데, 아무런 고소·고발도 없었고 이제와 다짜고짜 '블랙리스트의 몸통은 유인촌'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임오경 의원은 2015년 당시 31세, 27세였던 유 후보자 자녀들이 유 후보자의 자금을

보태 성동구 아파트를 담보 대출 없이 구입한 것을 거론, "아빠 잔스"를 사용한 것이냐"고 따지며 증여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자녀들은 독립된 생계를 갖고 있고, 본인들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지침대로 고지 거부할 한 것이며 증여세는 다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원내대표단에 광주·전남 초선 4인 합류

윤영덕·이용빈·윤재갑·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단에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개편 과정에서 호남지역구 최고위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 인선으로 풀이되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윤영덕(동남갑) 의원이 원내대변인에 임명된 데 이어, 이용빈(광산갑)·윤재갑(해남·완도·진도)·주철현(여수갑) 의원이 새롭게 원내부대표가 됐다.

윤영덕 대변인은 "지난 3년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스피커'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큰 책임감으로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부대표는 "21대 국회 시작과 끝을 원내 지도부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강서구청장, 법무장관 파면, 대법원장·장관

후보 임명 철회, '제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민생 예산 쟁기기로 유능한 정당,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부대표는 "민주당의 중추대인 시기에 원내부대표를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홍익표 원내대표와 힘을 합쳐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의 통합과 쇄신을 함께 이룰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재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설정해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부대표는 "민생위기,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윤영덕 의원 이용빈 의원 윤재갑 의원 주철현 의원

최근 법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이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데 기여하겠다"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가치 하에 정책극감과 총선 승리를 이끌고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야 협력, 당내 소통 및 정책과제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등 당에서 요직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호남권, 국가 R&D 예산 7.6% 불과"

민형배 "균형발전 역행...국감·예산안 심사서 예산 확보 만전"

지난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지역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북도가 3.8%, 광주시는 2.2%였고 전남도는 단 1.6%였다.

5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별 집행 국가 R&D 예산은 25조9717억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대전시 7조4698억원, 충북도 8121억원, 충남도 7333억원, 세종시 6218억원 등 9조6370억원으로 3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이 33.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5조1223억원과 3조3889억원을 확보했다.

반면, 호남지역은 전북도 9759억원, 광주시 5678억원, 전남도 4108억원 등 1조9545억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1030억원을 쟁겼다.

문제는 호남지역 예산 확대가 연례적으로 반



복된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호남지역 R&D 집행 예산 비중은 대체로 7%대에 갇혀있다.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7.7%로 0.3%가 낮아졌고, 2022년에는 7.6%를 기록했다.

민형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확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